

논단



남북한 분단 비용의 추정

홍성국 / 통일부 경제담당관

유휴 기계 설비의 대북한 이전을 통한 남북 경협

이상직 / 산업연구원 중국·북한연구팀

남북한 분단 비용의 추정

홍성국 / 통일부 경제담당관

한국 분단 비용의 규모는 1995년 현재 1,591억 달러(남한 193억 달러, 북한 1,761억 달러) 수준에 이르며,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통일 비용은 추정 기관이나 학자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연간 200억~60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연세대학교의 정갑영 교수는 통일시 북한 지역에 예상되는 적정 성장률(13.5%)을 도출하여 통일 비용을 추정한 결과, 연간 1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당해 연도 남한 GNP의 0.5% 미만)하는 등 일부 학자만이 통일 비용 규모를 극히 적게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될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분단 비용은 최소 1,591억 달러이고 연간 통일 비용은 최대 600억 달러이므로, 통일시에는 최소한 991억 달러 이상의 연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통일 비용의 과다 추정 문제 및 분단 비용의 가속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통일 이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볼 때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이 우려되어 통일 시기를 지연시켜야 한다거나 분단 고정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통일관이며, 오히려 하루빨리 통일을 구현하여 하나의 단위 경제로 통합하는 것이 민족 경제의 부흥·발전에 극히 유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제기: 분단 비용의 개념

남북한 경제는 분단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일반 국민 경제와는 다른 불균형의 왜곡된 경제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남북한 경제는 소모적 '분단 부

문'의 존재로 인해 생산물의 공급보다 수요가 항상 많은 수요 과잉의 불균형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국민 경제가 분단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국민 경제와는 달리 특수한 분단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단 인플레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첨예한 군사적 대립을 지속함으로써 쌍방의 군사 경쟁에 의해 군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의 경우 1995년 현재 적정 군사비는 78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군사비는 149억 달러로 71억 달러가 초과 지출되고 있고, 북한의 경우는 적정 군사비가 16억 달러인 데 비해 실제 군사비는 60억 달러 수준으로 44억 달러가 초과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비 과다 지출분만으로 정상적인 투자에 활용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소득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남북한 경제는 소모적 분단 부문 존재에 따른 경제 질서 교란으로 인해 남한은 시장 가격 기구를, 북한은 중앙 집권적 계획 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분단 상황에 대한 정치·경제적 악용, 요행주의, 체념, 재산 도피, 과잉 수요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보이지 않는' 분단 비용이 남북한의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분단 비용이란 국민 경제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분단됨에 따라, 국민 경제에 소모적인 분단 부문을 형성시킴으로써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일체의 경제 사회적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분단 비용은

남북 분단 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분단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며, 통일시에는 통일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부의 전환성 기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단 비용을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남북한이 분단되지 않고 하나의 단위 경제로 경제 발전을 도모해왔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기대 국민소득'에서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실현한 '실제 국민소득'을 차감한 '생산의 기회손실분' (opportunity loss)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 생산 함수의 추정

분단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단 상황을 제거한 남북한 단일 경제시의 기대 국민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성있는 생산 함수의 모색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일정한 가정이 불가피한데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남한 경제가 사회주의를 취하고 있는 북한 경제보다 크게 우세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해방 이후 분단되지 않은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성장·발전해왔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분단되지 않은 단일 경제하의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남한의 경제 발전 경로를 따라서 성장해가는 경제로 상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대 국민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생산 함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하였다.¹⁾ 이에 필요한 모수(parameters)의 추정치는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의 분단 지출을 제외한 다음, 순수한 단일 경제 생산 함수를 추정함으로써 도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분단 지출을 제거한 한국의 생산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Y_t = AK_t^\alpha \cdot L_t^\beta, \text{ 단 } \alpha + \beta = 1 \text{ 또는}$$

$$\ln Y = \ln A + \alpha \ln K + (1-\alpha) \ln L + \mu \dots\dots\dots (1)$$

$$Y_t = Y_s - Y_d \dots\dots\dots (2)$$

$$K_t = K_s - K_d \dots\dots\dots (3)$$

$$L_t = (1-u) \cdot L_p \dots\dots\dots (4)$$

- Y_t : 분단 지출을 제거한 당해 연도 GNP
- Y_s : GNP
- Y_d : 분단 지출
- K_t : 분단 자본을 제외한 당해 연도의 자본 저장
- K_d : 분단 자본
- L_t : 당해 연도 취업 인구
- L_p : 경제 활동 인구

u : 당해 연도 실업률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시적인 분단 지출의 완전한 포착은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한국이 지불 또는 부담하고 있는 총 분단 비용을 규명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군사비의 과다 지출분뿐만 아니라 통일 행정비, 통일 문제 관련 조직의 활동비 등 기타 분단 부문 관련 지출과 '보이지 않는' 분단 비용까지 고려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현실적 총 분단 지출을 포괄하도록 노력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는 Y로 'GNP - (군사비 과다 지출분 + 기타 분단 관련 지출)', K로 '남한 자본량 - (군사 자본 스톡 + 기타 분단 관련 지출) × 정부 지출 투자 비율', L로 '남한 노동량 - 취업 인구 × 0.03' 을 적용하여 시계열을 완성하였다.

(1) 식의 양변을 L_t 로 나누면

$$\frac{Y_t}{L_t} = AK_t^\alpha L_t^{\alpha} \dots\dots\dots (1)'$$

를 얻게 된다.

(1)' 식 좌변의 $\frac{Y_t}{L_t}$ 는 남한 GNP를 취업자 수로 나눈 것으로서 t기의 1인당 생산량

1) C.W. Cobb and P.H. Douglas(March 1998), "A Theory of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8, no.1, pp. 139~165, 그리고 P.H. Douglas(March 1998), "Are There Laws of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38, no.1, pp. 1~41 참조.

이다.

분단 국가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분단 부문과 후생 부문으로 구분되어지는 특수 경제 구조를 갖는다. 만약 분단되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경제라면 분단 부문과 후생 부문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분단 비용 - (분단되지 않고 통일이 된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기대 GNP) - (분단된 상태에서 달성한 실제의 현실 GNP)'에서 '남북한 경제가 양분되지 않은 단일 경제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기대 GNP'는 분단 부문을 제외한 후생 부문만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콥-더글라스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되는 Y는 GNP에서 과다 지출된 군사비 등 분단 관련 지출의 총계를 차감한 것이고, K는 남한 자본량에서 분단 부문 생산에 사용된 자본량을 차감한 것이며, L은 남한 노동량에서 분단 부문 생산에 사용된 노동량을 차감한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생산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A, α 값의 추정이 필요하다. 즉, 여기에서는 (1)' 식을 추정하여 A, α 값을 알고자 한다. 추정을 위해 (1)' 식에 Log를 취하면,

$$\ln \left(\frac{Y_t}{L_t} \right) = \ln A + \alpha \cdot \ln \left(\frac{K_t}{L_t} \right) \dots (1)''$$

(1)'' 식 우변의 계수(α)는 자본의 탄력성을 나타낸다. 이때 자본 탄력성(α)은 장기적

이고 거시적인 함수의 계수이기 때문에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²⁾ 추정 결과,

$$\ln \left(\frac{Y_t}{L_t} \right) = 3.955943 + 0.572477 \ln \left(\frac{K_t}{L_t} \right) \dots \dots \dots (5)$$

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정된 (5)식의 생산 함수는 분단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해주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 생산 함수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전체 분단 비용의 추정

추정 방법

분단 상황을 제거한 한국 경제를 대변하는 대표적 생산 함수의 모수 A, α 가 추정됨에 따라서, 남북한 단일 경제 하의 기대 국민 총생산은 다음의 (6)식에서 (8)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Y_e = A K_e^\alpha \cdot L^{1-\alpha} \cdot \mu \dots \dots \dots (6)$$

$$K_e = K_s + h \cdot \delta (1-u) L_n \dots \dots \dots (7)$$

$$\text{단, } \delta = \frac{K_t}{L_t} = \frac{K_n}{h(1-u)L_n}$$

$$L_e = h(1-u)(L_s + L_n) \dots \dots \dots (8)$$

2) 장기적인 거시함수에 있어서 α 는 일정 불변의 수치로 회귀하는 경향을 갖는다.

- Y_e : 기대 국민총생산 또는 기대 국민 생산 능력
- K_e : 기대 자본량
- L_e : 기대 노동량
- δ : 자본 장비율
- h : 경제 활동 참가율
- L_s 및 L_n : 남한 및 북한의 14세 이상 인구
- K_n : 북한 지역의 기대 자본 저장
- u : 실업률

data)를 토대로 남북한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분단 비용의 추계가 정의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F_t = Y_e - Y_g \dots\dots\dots (9)$$

$$Y_g = Y_s - Y_n \dots\dots\dots (10)$$

- F_t : 당해 연도 분단 비용
- Y_g : 남북한 현실 GNP의 합계
- Y_s 및 Y_n : 남북한 각각의 현실 GNP

추정 결과

(7)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K_e 는 남한 지역의 기대 자본 저장량과 북한 지역의 예상되는 자본 저장량의 합계이다. 여기에서 단일 경제하 북한 지역의 기대 자본량 K_n 은 분단 부문의 자본 저장량을 제거한 남한의 총자본 저장량과 노동의 비율 즉, 자본 장비율이 북한 지역에서도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8)식의 기대 노동량도 단순한 남북한의 경제 활동 인구의 합계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큰 경제체제 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4세 이상 인구는 자연 증가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14세 이상 인구에 경제 활동 참가율을 곱하고 여기에 실업률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본 모형의 계량적 추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가용한 1970~95년 기간 중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법(Regression Analysis)에 의해 30여 회에 걸쳐 반복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추정에 있어 요구되는 통계 자료로서 국민총생산은 한국은행의 1990년 불변 가격 시계열 자료를,³⁾ 인구 및 노동 통계는 통계청의 자료들을 이용하였으며,⁴⁾ 한국의 자본 스톡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교수의 추계를 근간으로 하여 시계열을 완성하였다.⁵⁾ 그리고 분단 부문에 투입된 자본 스톡과 노동량은 기본적으로 조동호 박사의 자료가 이용되었다.⁶⁾

이상과 같은 시계열 자료(time series

3) 한국은행 조사제2부 국민계정실.
 4) 통계청(1997. 3), 「한국 주요 경제 지표」 및 경제기획원(1985), 「주요 경제 지표」.
 5) 김준영(1995), 「한국의 총자본 스톡: 민간 및 정부 사본 스톡 추계」, 한국경제연구원.
 6) 조동호(1997. 6),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민족통일연구원, p. 78.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 후생 부문의 생산 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ln\left(\frac{Y_t}{L_t}\right) = 3.955943 + 0.572477 \cdot \ln\left(\frac{K_t}{L_t}\right) \dots (11)$$

(12.759) (26.106)

$R^2 = 0.966$, ()의 값은 t-통계량임.

위의 방정식으로부터 한국 후생 부문의 생산은 가정에 따라 '규모에 대한 불변 보수'(constant return to scale)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생산을 결정하는 요소인 자본과 노동 가운데 자본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안의 t-통계량 값이 매우 높고 추정된 생산 함수의 설명력을 나타내주는 결정 계수인 R^2 도 또한 만족할 만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술 진보와 관계해보면 본 모형에서의 생산 함수는 기술이 체화된(embodied) 생산 함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함수에서 표시되는 노동이나 자본은 동질적인 것이 되지는 못한다.⁷⁾ 기술 진보(technical process)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시적 생산 함수를 생각해 보자.

$$Y = f(\lambda_L \cdot L, \lambda_K \cdot K)$$

여기에서 $\lambda_L = \lambda(t)$, $\lambda_K = \lambda(t)$ 로서 다음의 성격을 갖는다

$$t = 0 \text{ 일 때, } \lambda(t) = 1$$

$$t > 0 \text{ 일 때, } \lambda(t) > 0, \frac{d\lambda}{dt} > 0$$

따라서, λ_L 과 λ_K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이를 구체적인 생산 함수에 넣어 다루어 보자.

$$\lambda_L = e^{\phi t}$$

$$\lambda_K = e^{\nu t}$$

즉, 기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ϕ 또는 ν 의 성장률과 각각 변하는 것을 말한다. 콥-더글라스생산함수에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Y_t = AK^{\alpha}L^{\beta} = (e^{\phi t}K)^{\alpha} \cdot (e^{\nu t}L)^{\beta} = e^{(\alpha\phi + \beta\nu)t} K^{\alpha}L^{\beta}$$

$$\therefore \lambda = e^{(\alpha\phi + \beta\nu)t}$$

그런데 본 모형에서 추정된 α 의 값은 0.57248이고 β 는 0.42752의 값으로 추정되어 $\alpha > \beta$ 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α 의 값이 β 의 추정치보다 높게 보

7) R.G.D. Allen(1967), *Macro-economic Theory: A Mathematical Treatment*, London: Macmillan, pp. 281~304.

이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가 개발 과정에서 자본의 기술 진보가 생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분단 부문을 제거한 한국 경제의 거시적 생산 함수의 추정을 기초로 하여 단일 경제 하의 기대 국민총생산과 분단 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읽을 수 있듯이 기대 GNP는 연평균 8.4%씩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 분단 비용은 지난 25년 동안에 연평균 9.8%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분단 비용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 성장 및 기술 진보로 생산력이 높아짐으로써 분단 상황을 해소 또는 유지하는 데 기회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 지출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분단 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단 비용의 절대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된다.

$$\frac{dF}{dt} > 0, \frac{dF^2}{dt^2} > 0$$

또한 본 모형에 따르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작아질수록 분단 비용은 작아지게 된다. 즉, 남북한 전체의 현실적인 국민총생산이 기대 국민총생산에 가까워져야만 분단 비용은 작아지게 된다. 이것은 다음의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F_t = Y_e - Y_g \quad \dots\dots\dots (12)$$

$$Y_g = Y_s + Y_n \quad \dots\dots\dots (13)$$

<표 1> 남북한 전체 분단 비용 추정 결과

(단위: 억 달러, 1990년 불변 가격)

연도	기대 GNP	현실 GNP	분단 비용	연도	기대 GNP	현실 GNP	분단 비용
1970	703	550	153	1983	2,188	1,576	612
1971	772	589	183	1984	2,331	1,663	668
1972	834	630	204				
1973	912	694	218	1985	2,494	1,776	718
1974	1,000	758	242	1986	2,672	1,915	757
				1987	2,917	2,078	839
1975	1,084	832	252	1988	3,140	2,236	904
1976	1,200	901	299	1989	3,397	2,412	985
1977	1,336	987	349				
1978	1,518	1,109	409	1990	3,712	2,632	1,080
1979	1,697	1,225	472	1991	4,057	2,857	1,200
				1992	4,340	3,050	1,290
1980	1,796	1,323	473	1993	4,601	3,234	1,367
1981	1,915	1,404	511	1994	4,946	3,463	1,483
1982	2,044	1,484	560	1995	5,308	3,717	1,591

$$D = |Y_s - Y_n| \dots\dots\dots (14)$$

(14)식으로부터 $Y_s > Y_n$ 이라면 (13)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진다.

$$Y_g = Y_s + Y_s - D = 2Y_s - D \dots\dots\dots (13)$$

그런데 F_t 가 작아지려면 Y_e 의 값이 작아지거나 또는 Y_g 가 Y_e 의 증가 정도보다 크게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Y_s 의 값이 시간에 따라 최소한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D 의 값이 작아지고 Y_g 가 커질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F_t 는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분단 비용은 1인당 GNP가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70년대 중반까지는 그 증가 속도가 완만하다가 그 이후 격차가 벌어지면서 점차적으로 급해지고 있음을 <표 1>로부터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분단 비용의 주 원인이 북한의 저성장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한 및 북한의 분단 비용 추정

남한 분단 비용의 추정

만약 남북한이 분단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 경제를 이룬 가운데 경제 발전을 도모해 왔다면 보다 큰 성장세를 나타냈을 것이다. 분단 부문에 투입된 소모적인 분단 관련 지출대신 자본을 증가시켜 건전한 투자 재원으

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분단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 역시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순수한 의미의 경제 활동 인구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분단 조건을 소거했을 경우 증가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각각 ΔK_t , ΔL_t 로 표시할 때, 한국의 대표적 생산 함수를 이용하여 남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기대 GNP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Y_e = 3.9559 + 0.572477 \cdot \ln(K_s + \Delta K_s) + 0.427523 \cdot \ln(L_s + \Delta L_s)$$

여기서 ΔK_s 는 '군사비를 포함한 분단 관련 지출-단일 경제시 적정 군사비 지출' 가운데서 실제로 생산에 투자되는 몫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분단 조건이 없었을 경우 자본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 자본량은 스톡 개념이므로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 상각으로 자본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점도 적용하였다. ΔL_s 는 '분단시 남한의 분단 부문 종사자 수-단일 경제시의 적정군 병력 수'로 구체화된다. 분단시 남한의 분단 부문 종사자 수는 당해 연도 병력 수에 1.3을 곱함으로써 도출하였으며, 단일 경제시의 적정군 병력 수는 기본적으로 조동호의 추정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제 상기의 방법으로 시계열이 완성되었다면 남북한이 분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

지역 경제가 실현할 수 있는 기대 GNP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남한 지역의 기대 GNP는 분단 부문 해소로 얻어지는 자본의 증가 ΔK_s , 노동의 증가 ΔL_s 를 실제 생산 함수의 변수들인 K_t 및 L_t 에 추가 대입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1970~95년 기간중 분단 조건을 소거한 남한 지역 경제가 실현할 수 있는 기대 GNP에다가 남한이 실제로 실현한 현실 GNP를 차감하면 그 차이가 바로 t기의 분단 비용을 나타내는데, 이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만의 분단 비용은 1970년의 112억 달러에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여 1990년에는 251억 달러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세를 보여 1995년 현재는 분단

비용이 19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남한 분단 비용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소련·동구 사회주의 제국 붕괴에 따른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 저유가·저금리·저환율 등 소위 '3저 현상' 등에 힘입어 분단 부문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반면, 후생 부문의 생산력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분단 비용의 추정

본 모형에 따라 북한 경제 성장형의 생산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GNP 및 자본 저장, 노동 등 생산 요소에

<표 2> 남한의 분단 비용 추정 결과

(단위: 억 달러, 1990년 불변 가격)

구분	기대 GNP	현실 GNP	분단 비용	구분	기대 GNP	현실 GNP	분단 비용
1970	622	510	112	1983	1,633	1,431	202
1971	668	548	120	1984	1,718	1,515	203
1972	712	583	129				
1973	765	631	134	1985	1,833	1,625	208
1974	824	684	140	1986	1,951	1,741	210
				1987	2,119	1,884	235
1975	881	738	143	1988	2,261	2,029	232
1976	964	806	158	1989	2,442	2,200	242
1977	1,057	881	176				
1978	1,181	990	191	1990	2,651	2,400	251
1979	1,294	1,100	194	1991	2,871	2,628	243
				1992	3,052	2,839	213
1980	1,382	1,187	195	1993	3,227	3,028	199
1981	1,456	1,267	189	1994	3,449	3,251	198
1982	1,543	1,347	196	1995	3,686	3,493	193

대한 시계열 통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폐쇄체제를 유지·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계획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1965년부터 경제 통계를 일체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간혹 김일성의 신년사, 예산 결산 보고서, 경제 계획 보고서 및 각종 행사의 보고서에 나오는 단편적인 몇개의 통계치가 북한이 발표하는 경제 통계의 전부인데, 그것도 대부분이 통계가 발표되지 아니한 일정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배수로 발표하므로 시계열이 결여됨은 물론 실적의 과장 선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경제 분석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의 빈곤과 신빙성의 결여로 북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설명해주는 생산 함수를 도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따라 사회주의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는 북한이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하였을 때, 기왕의 사회주의 개념에 입각한 북한 경제 관련 판단 자료는 그 자료 가치가 반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다소 변칙적이기는 하지만 회귀분석법에 의한 구체적인 계량 추정보다는 '자본주의체제 하의 북한 경제'라는 가정을 충족시켜주는 기대 GNP를 도출함으로써 북한이 감수하고 있는 분단 비용을 추정하기로 한다.

만약 북한이 당초 자본주의체제를 취한다

고 하였을 경우, 남한 지역보다는 부존 자원이 풍부하고 제반 산업 시설 역시 양호하였으므로 남한보다는 높고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최소한 남북한 전체 생산력의 평균 수준은 유지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결코 무리한 가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남북한 전체의 1인당 평균 생산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요컨대, 자본주의체제 하의 북한의 생산력은 '남북한 전체의 1인당 평균 생산 = 북한의 1인당 평균 생산'으로 간주하여 산출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기대 GNP를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북한의 기대 GNP가 도출되었으므로 북한이 실제로 실현한 현실 GNP를 차감하면 북한의 분단 비용이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저효율적이고 경직적인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해왔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분단 비용은 규모 면에서 남한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고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 분단 비용의 증가폭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북한 분단 비용의 추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남북한 전체의 1인당 평균 생산과 북한 기대 GNP

(1990년 불변 가격)

구분	1인당 평균 생산(달러)	노동 인구 (천 명)	기대 GNP (억 달러)	구분	1인당 평균 생산(달러)	노동 인구 (천 명)	기대 GNP (억 달러)
1970	5,020	5,042	253	1983	10,398	7,924	824
1971	5,335	5,193	277	1984	11,124	8,175	909
1972	5,533	5,349	296				
1973	5,746	5,509	317	1985	11,466	8,442	968
1974	6,044	5,815	351	1986	11,832	8,781	1,039
				1987	12,225	8,971	1,097
1975	6,412	6,021	386	1988	12,726	9,225	1,174
1976	6,692	6,239	418	1989	13,196	9,486	1,252
1977	7,227	6,461	467				
1978	7,849	6,687	525	1990	13,968	9,755	1,363
1979	8,464	6,924	586	1991	14,795	10,193	1,508
				1992	15,489	10,540	1,633
1980	9,102	7,073	644	1993	16,129	10,784	1,739
1981	9,455	7,414	701	1994	16,792	11,074	1,860
1982	9,818	7,656	752	1995	17,515	11,325	1,984

맺음말

오늘날 통일 비용에 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직까지 분단 비용은 홍성국(1986), 조동호(1997) 외에 추정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홍성국은 1984년 현재 217.3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조동호는 1995년 현재 169.2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분단 부문의 일부인 군사비 지출 자료를 중심으로 분단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추정 결과는 분단 비용의 일부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 분단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는 추정 결과의 신빙성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추정 방법이 중요시된다. 여기에서는 추정

방법에 있어 기존의 추정 모형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데 기본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군사 비자료외에 통일원, 외무부 등의 통일 행정비까지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포괄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분단 비용의 일부를 추정하는 데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분단 비용을 남북한 전체, 남한, 북한 등으로 분리하여 추정함으로써, 분단 비용 부담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분단 비용의 특징과 성격은 물론이거니와 분단 비용이 주로 어느 경제체제

〈표 4〉 북한의 분단 비용 추정 결과

(단위: 억 달러, 1990년 불변 가격)

구분	기대 GNP	현실 GNP	분단 비용	구분	기대 GNP	현실 GNP	분단 비용
1970	253	40	213	1983	824	145	679
1971	277	41	236	1984	909	148	761
1972	296	46	250				
1973	317	63	254	1985	968	151	817
1974	351	73	278	1986	1,039	174	865
				1987	1,097	194	903
1975	386	94	292	1988	1,174	206	968
1976	418	95	323	1989	1,252	211	1,041
1977	467	106	361				
1978	525	119	406	1990	1,363	231	1,132
1979	586	125	461	1991	1,508	229	1,279
				1992	1,633	211	1,422
1980	644	135	509	1993	1,739	205	1,534
1981	701	136	565	1994	1,860	212	1,648
1982	752	136	616	1995	1,984	223	1,761

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추정된 결과를 토대로 한국 분단 비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95년 현재 남북한 전체의 분단 비용 부담률 42.8%로서 남북한은 막대한 분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남한 5.5%, 북한 789.5%). 이와 같은 무거운 분

단 비용 부담률은 하루빨리 통일을 실현해야 민족 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유리하다는 실증적 논거를 제시해준다.

둘째, 북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과도한 체제 선전비 부담 등 막대한 규모의 소모성 지출로 인해 남한보다 북한의 분단 비용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⁸⁾

〈표 5〉 남북한 분단 비용 추정 결과

(단위: 억 달러)

연도	남북한 전체	남한	북한	남한:북한
1970	153	112	213	1:1.9
1975	252	143	292	1:2.0
1980	473	195	509	1:2.6
1985	718	208	817	1:3.9
1990	1,080	251	1,132	1:4.5
1995	1,591	193	1,761	1:9.1

이것은 대부분의 분단 비용이 남한보다는 북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북한이 비효율적인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때 분단 비용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남한과 북한이 각각 부담하고 있는 분단 비용의 합계가 곧 남북한 전체의 분단 비용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 각각의 기대 국민총생산이 분단에 의한 경쟁 효과때문에 남북한 전체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데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분단 비용의 규모는 1995년 현재 1,591억 달러(남한 193억 달러, 북한 1,761억 달러) 수준에 이르며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통일 비용은 추정 기관이나 학자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연간 200억~60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연세대학교의 정갑영 교수는 통일시 북한 지역에 예상되는 적정 성장률(13.5%)을 도출하여 통일 비용을 추정한 결과, 연간 1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당해 연도 남한 GNP의 0.5% 미만)하는 등 일부 학자만이 통일 비용 규모를 극히 적게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될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분단 비용은 최소 1,591억 달러이고 연간 통일 비용은 최대 600억 달러이므로, 통일시에는 최소한 991억 달러 이상의 연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통일 비용의 과다 추정 문제 및 분단 비용의 가속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통일 이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볼 때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이 우려되어 통일 시기를 지연시켜야 한다거나 분단 고정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통일관이며, 오히려 하루빨리 통일을 구현하여 하나의 단위 경제로 통합하는 것이 민족 경제의 부흥·발전에 극히 유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統**

8) 북한은 체제 선전비로만 연간 8.9억 달러를 소모하고 있다.